“탄흔 방향·밀집 정도 감안 기관총 무차별 난사 배제 못해”

국과수 감정서 뜯어보니…5·18 헬기 기총소사 무게

헬기 양쪽 문 거치 사격 가능성

시민 적 간주 작전 나서 비난 일듯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왜 헬기에서 사용한 무기가 무엇인지는 왜 판단을 유보했을까.

광주시의 의뢰로 전일빌딩 현장조사에 나선 국과수는 건물 10층 내부 탄흔(150여점)은 헬기 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사실상 단정 지으면서도 적군을 상대로 무자비한 살상작전시 사용되는 ‘기총소사’(機銃掃射)인지, 헬기에 탑승한 소총병에 의한 사격인지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최고 총탄 감정 전문가인 김동환 국과수 총기안전실장이 쓴 ‘전일빌딩 총탄 흔적 감정서’를 찬찬히 뜯어보면, 당시 계엄군이 투입한 헬기에서 사용된 무기는 기관총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총소사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하는 이유는 단순 헬기 사격과 달리 기총소사의 경우, 헬기에 설치된 기관총 등으로 무차별 난사한 사격이라는 점에서 군(軍)이 민주화 시위에 나섰던 시민을 사실상 적(敵)으로 규정하고 작전에 나섰다는 엄청난 비난에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12일 국과수가 광주시에 제출한 감정서 9~10페이지(A4 용지 52페이지 분량) 보면, 국과수는 5·18 당시 현장 주변을 기동한 헬기는 UH-1, 500MD 기종으로 두 헬기의 무장은 7.62㎜ 실탄을 사용하는 M 60 계열의 기관총이나 M 134 미니건 계열의 기관총을 사용했다고 전제한다.

그러면서 건물 10층 내부 창틀 주변 목재 마감재에서 식별되는 탄흔의 크기로만 봐서는 M 16 소총의 가능성을 우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라면 발견된 탄흔의 숫자가 최소 150개 이상인 점과 M16 소총의 탄창이 20발 또는 30발 탄창인 점으로 볼 때, 1인이 탄창을 교환하며 사격했거나 2인 이상 다수가 동시에 사격한 정황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2일 광주시에 전달한 ‘전일빌딩 총탄 흔적 감정서’는 건물 10층 내부 바닥과 사각 기둥, 천장과 창틀에 나타난 총탄 흔적(왼쪽부터)과 탄흔 생성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경우 사실상 ‘헬기에 의한 기관총 사격’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국과수 제공〉

그러나 천장에 부착된 텍스와 바닥에 떨어진 텍스 사진을 조합했을 때 나타나는 탄흔의 생성 방향은 한 지점에서 좌·우로 방사형으로 펼쳐진 형태이며, 이 같은 형태의 탄흔은 총가(銃架·총기 거치대)에 거치된 기관총의 사격에서 나타날 수는 있으나 다수의 소총병에 의한 동시 사격으로는 나타나기 힘든 형태의 탄흔이라고 단정짓는다.

창틀 주변 탄흔 크기로 M 16 소총 가능성을 우선 추정했으나, 탄흔 형태를 종합할 경우 ‘소총병 사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탄흔 형태는 아니다’고 앞서 내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국과수는 이어 당시 투입된 UH-1과 500MD 헬기의 무장에서 M 134 미니건은 기체 전면을 향해 고정된 총기이고, 6열의 회전식 총열을 사용하며 발사속도는 저속 모드에서도 분당 2000발 내외이므로, 탄흔의 밀집 정도를 감안하면 M 134 미니건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천장 텍스에서 식별되는 탄흔 생성방향을 고려하면 UH-1 헬기 양쪽 문에 거치된 M 60 기관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한다.

즉, 기둥에서 발견된 탄흔의 크기로 소총사격임을 우선 추정했으나 탄흔 생성 방향과 탄흔 밀집 형태를 종합하면, UH-1 헬기에 거치된 M 60 기관총에 의한 기총소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국과수가 광주시가 추가 감정을 의뢰할 경우 재조사에 나서 헬기에서 사용한 무기 종류를 명쾌하게 밝히겠다고 감정서를 통해 먼저 밝힌 것도 이처럼 현장 조사를 통해 기총소사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과수는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의 탄도를 감안하면 일부 탄환이 천장 슬라브와 텍스 사이 공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광주시 의뢰를 받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해 탄환을 발견할 경우 사용 총기류에 대한 규명이 가능하다고 국과수는 감정서에 적시했다.

국과수는 앞서 지난달 전일빌딩 10층 내부 현장 조사 과정에서 150여점의 탄흔을 발견하고, 계엄군 헬기 사격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국과수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발견된 탄흔은 총기 발사는 천정의 경우 수평 또는 10도 이상의 상향, 기둥우측면과 바닥의 경우 수평기준 46도 하향, 기둥 전면의 최하단 탄흔과 외벽 근처 탄흔의 경우 최소 50도 이상 하향 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탄흔 분석 결과와 1980년 5월 금남로 주변에 10층 높이와 유사한 규모의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헬기와 같은 비행체에서 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입국장에서 밝은 표정으로 어린이를 안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조항이 정치행보 막지 않는다”

23만달러 수수 의혹 일축…“동생·조카 기소 국민에 송구”

지지자 몰린 반기문 귀국 현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아시아나 OZ221편으로 입국한 반 전 총장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정일영 인천공항 사장의 영접을 받으며 탑승교를 나섰다. 검은 양복과 붉은색, 은색 줄무늬 넥타이 차림을 한 반 전 총장은 “편안하게 왔다”며 밝게 웃었다.

공항철도를 타고 귀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전철같은 거 못 타지 않나. 평시민이 됐으니까 전철도 자주 타고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반 전 총장 측이 인천공항에 특별의전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직 사무총장에 대한 의전일 것”이라면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정도 예우를 받는다. 특별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동생 반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 씨가 미국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가까운 친척이 그런 일에 연루가 돼서 개인적으로 민망하고,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대선 출마 마음을 굳혔는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의 선출직 참여 금지 조항에 대해 “그것이 저의 선출직과 관련된 정치 행보를 막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자신에게 제기된 ‘박연차 23만 달러 수수설’을 비롯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50여년간 대한민국에서, 유엔에서 국가와 민족, 세계 인류를 위해 공직자로서 일하는 가운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제 귀국에 즈음해 제 개인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떠돌고 있고, 또 방송이나 신문에 떠돌지만, 그 모든 게 진실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저의 경험과 식견으로 정치 참여를 통해 조국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제 순수하고 참되고 소박한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지극히 편파적 이익을 앞세워 일부 인사들이 보여준 태도는 유엔과 제 가슴에 큰 상처를 안겨줬고 실망을 안겨줬다”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헌신하고자 하는 내 진정성과 명예, 유엔의 이상까지 짓밟는 이런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영선 “최순실 데리고 청와대 출입한 적 없다”

탄핵심판 4차 변론…자신이 보낸 문자 메시지와 배치 위증 논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를 데리고 청와대로 출입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 행정관은 12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정호성 비서관에게 ‘최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낸적이 있느냐”는 이정미 재판관의 질문에 “(정 전 비서관 핸드폰) 문자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행정관의 증언은 앞서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없다고 한 자신의 증언 내용과 배치돼 위증 논란을 불렀다.

이 재판관은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는 본인이 차를 타고 (최씨와) 함께 들어간다는 것 아니냐”며 “이는 증인이 최씨를 청와대로 데리고 태워간 적이 없다고 한 증언과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행정관이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것으로 인정한 문자의 내용과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간 적이 없다는 이 행정관의 증언이 서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 재판관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해 이 행정관이 명확한 답변을 계속해서 거부하자 “(최씨를) 태워간 적이 있냐, 없냐. 위증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히 얘기하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이 행정관은 “청와대로 출입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다면 말하기 곤란하다”며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 행정관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증언 거부를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